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 위원장이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 추진”

자치분권 종합계획 확정 권한이양 등 자율성 확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 모델 구현이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 주요 과제로 확정되면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1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 분권'이라는 비전과 '주민과 함께하는 정부, 다양성이 꽃피는 지역, 새로움이 넘치는 사회'라는 목표 아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6대 추진전략과 33개 과제로 구성됐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에서는 6대 전략으로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을 내걸었다.

특히 정부는 제주·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치분권 모델 정립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권한 이양 등 자율성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세부 추진 계획은 각 부처가 시행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대선 공약이 국정과제로 반영됐고 국정과제로 나온 것을 정부 정책 결정으로 의결, 공식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가칭 '서부중' 설립 탄력… 교육부 '조건부 인정'

위치변경 부대조건 달아

제주시 서부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가칭)서부중학교' 설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 갑)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5일 전라남도 여수에서 열린 수시 1차 중앙 투자심사에서 '학교 위치 변경'이라는 부대조건을 달고 '(가칭)서부중학교' 설립을 조건부로 인정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지역의 오랜 숙원이 해결됐다. 모든 제주교육 가족들과 함께 환영한다”며 “조건부 인정이기 때문에 남은 과제 해결을 위해 충실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창일 의원은 이날 교육부의 결정을 전하며 “제주 서부지역의 숙원 사업을 해결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지속적으로 제주의 교육여건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부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서부지역 중학교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대조건 이행이 남아있기 때문에 학교부지 선정과 교육환경평가 등을 충실히 진행해 안정적으로 학교설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도동 지역에 들어설 예정인 가칭 '서부중'은 설립되면 36학급 1080명(특수학급 1학급) 규모로 운영된다.

국회·부미현기자

신화역사공원 행정사무조사 발동되나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특별업무보고

객실 등 대폭 확대 불구 상하수도 낮게 책정 특혜 의혹까지 제기… “사업 중지 가능성”

제주도의회가 신화역사공원의 사업 허가 과정에 특혜 의혹과 함께 행정사무조사 가능성을 제기해 도의회 행정사무조사권이 발동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11일 제364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현안사항 특별업무보고를 받고 제주신화월드 사업허가 및 변경 과정에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제주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제주신화월드는 투자진흥지구 최초 지정 이후 지난해까지 총 아홉차례 개발계획이 변경되면서 규모가 커졌지만 상·하수도 사용 계획량은 2014년보다 오히려 감소했다.

신화월드는 2014년 5월 계획이 변경되면서 객실수가 종전 1443실에서 4890실로 3447실 증가했으며, 이후 일부 감소되긴 했지만 현재도 2014년 이전보다 1674실 증가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은 “신화역사공원은 사업을 변경하면서 처음 사업승인을 받을 때 진행된 환경영향평가를 적용하고, 최초

환경영향평가 협의 때보다도 낮게 상·하수 발생량을 산정했다”며 “이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초과 사용해 상수도는 2월과 6월, 7월, 8월에 초과했으며, 하수도는 1~8월 중 초과하지 않은 달을 찾아볼 수 없다. 앞으로 4개 지구 개발이 모두 완료되면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또 “객실수가 늘었지만 상하수도 양은 감소한 것으로 사업을 허가해준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의회에서 행정조사권을 발동하면 조사받을 의향이 있느냐”며 “집행부는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정말 아닌지 법률적 자문을 다시 얻어 허가 절차상의 기본적 문제가 발생한다면 사업 자체가 중지되거나 무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도 “신화역사공원과 대중교통체계 개편 문제 등은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할 시기가 된 것 같다”며 “법적, 절차적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거듭었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은 “신화역사공원의 상·하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11일 제364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현안사항 특별업무보고를 받고 제주신화월드의 관련한 문제를 제기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수 발생량을 원 단위로 줄여 산정할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상수도 약 57억원, 하수도 약 110억원을 추가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제주도와 JDC가 절반도 안 되는 136ℓ로 변경해 재정적 손실도 있다”며 “원인자부담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요구했다.

강연호 의원(무소속, 서귀포시 표선면)은 “신화역사공원 오수 역류 사태가 크게 이슈화되면서 제주관광에 상당한 타격을 줬다”며 “숙박시설이 확대되는데도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이뤄지지 않고 사업을 허가한 것이 적절하냐”고 물었다.

박원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

시 한림읍)은 “신화월드의 당초 사업 계획에 따른 1인당 1일 급수량 333ℓ를 적용해 오수량을 산정하면 7000t에 달한다”며 “이는 신화월드에서 배출된 하수를 처리하는 대정 하수처리장의 증설 규모인 8000t에 가깝다. 이번 증설은 신화월드의 개발사업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증설 비용을 사업자에 요구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와 상하수도본부, JDC는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가능토록 특별법 개정 등 제도 개선과 함께 원인자부담금 추가 납부 이행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제주도 버스 준공영제 비용 전국 최고

정비직 월 인건비 최대 860여만원 달해

강성민 “인천 0.66% 불구 제주는 2.02%”

제주도의 버스 준공영제 예산 비용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버스 업체의 정비직 월 인건비가 최대 86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은 11일 열린 제364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환경도시위원회 현안사항 특별업무보고에서 제주도 교통항공국을 상대로 제주도의 버스준공영제 재정 지원율이 가장 높으며 개선 대책을 촉구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2018년)를 포함해 전국에서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광역지방자치단체별(2016년) 재정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주도가 총 예산 대비 가장 높은 2.02%를 지출했다. 이어 대구 1.49%, 광주 1.29%, 부산 1.26%, 서울 1.05%, 대전 0.87%,

인천 0.66% 순이었다.

강 의원은 “도내 7개 버스 업체의 정비직 월 인건비 분석 결과 정비비 수가 5명인 A사는 860여만원, 6명인 B사는 440여만원으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표준운송원가를 대당 1일 1만2121원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차량이 많지만 정비비가 적으면 인건비가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이 같은 경우 그 차액은 회사 이익이 될 수밖에 없고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에 빠질 위험성이 높다”며 “표준운송원가를 항목을 차량비용, 운행비용, 운영비용의 세 가지 정산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은 “대중교통체

계 개편 이후 1일 이용객이 11.4% 증가했다고 발표했지만 버스 증가율 59%, 운전원수 증가율 142% 등에 비하면 재정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서울 교통체계 개편 사후관리와 용역을 담당했던 회사는 편도 4차선 이상의 도로가 아니면 중앙차로제는 무조건 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안창남 의원(무소속, 제주시 삼양·봉개동)도 “광양사거리~아라조등학교 중앙차로 구간의 버스평균 통행속도가 종전 13.2km에서 18.9km로 향상됐다지만 전체 2.7km 구간에서 시속 6km가 빨라진 것은 1~2분 차이에 불과해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며 “나머지 90% 운송수단을 담당하는 승용차들의 운행시간이 늘어나 매연이 발생하고 연료가 추가 소비돼 경제적으로 되레 손해에서 원회통 지사가 말하는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하고도 상충된다”고 질타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은 “2017년 1월부터 8월 25일까지 1일 평균 1.64건의 사고가 발생했지만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인 1일 평균 1.76건으로 높아졌다”며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인도폭이 1.3m에서 3m까지 감소돼 보행 불편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원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림읍)도 “시설기준은 인도폭을 최소 지방은 2.5m, 도시 지역은 3m 이상으로 하지만 제주도는 1.3m”라며 “중앙차로제를 설계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자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도의회에서 도민 인식을 조사 중이므로 잠시 중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현대성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버스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요금을 내야 하는 게 맞다. 버스 요금을 현실화하고 표준운송원가도 줄여가겠다”며 “다만 도민들,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최소한 보장하기 위해 면제나 감면폭을 얼마나 해줄 것인가는 사회적 이해 수준에서 결정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표성준기자

2019년도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개발사업 과제 공모

◎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에 의거 환경부, 제주특별자치도, 참여기관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 특유의 환경문제 해결과 기업체 애로기술 개발 등 지역특화기술개발을 목적으로 2002.3.4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16호로 지정을 받아 제주대학교를 주관기관으로 하여 설립된 기관입니다.

◎ 우리센터에서는 제주지역의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용화 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2019년도에 수행할 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공모 분야

- 환경정책연구 분야 : 제주지역의 환경정책수립에 기여, 반영될 수 있는 정책 연구과제 (단, 지자체 조례·개정 등 연구성과가 명확히 제시된 과제)
- 환경조사연구 분야 : 제주지역 환경현안문제에 부합되는 연구과제, 지자체 조례·개정, 논문 등 연구성과가 명확히 제시된 과제
- 환경기술개발연구 분야 : 제주지역 환경개선(환경오염 예방·저감)에 필요한 실용화 기술개발
 -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기술 및 현장 적용 가능성이 높은 기술개발
 - 지역 내 환경현안 반영 및 환경오염 물질저감 프로세스 개선 등 환경적용 기술개발 (단, 특허출원·등록, 논문 등 연구성과가 명확히 제시된 과제)

- 산학협력연구 분야 : 참여기업의 연구비 일부(한금 30%이상) 부담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 사업기간 : 2019. 4. 1 ~ 2019. 12. 31(예정)

■ 신청 대상자 - 행정기관, 대학, 연구기관, 사회단체, 산업체, 시민 등

■ 접수(공모 기간) - 2018. 09. 12(수) ~ 2018. 10. 05(금) (24일간)

■ 접수 방법

- 센터 홈페이지에 첨부된 해당 서식을 작성하여 E-mail, 우편, FAX로 신청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 접수 후 센터로 확인 전화연락 필수, hwp로 작성/ 파일명은 2019 과제제안서(제안자 소속 및 이름)로 함

■ 과제제안 시 유의사항

- 환경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관련 과제 및 전국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추진한 과제는 중복 제안 불가 [’86~’17년도 전국센터 연구과제 목록(참보)]
- 제안서는 자세히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과제 수행 후 연구성과 활용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
- 제안한 연구과제의 성과가 연구 종료 후 3년 이내에 활용되지 않으면 그 과제의 응모자에 대하여 다음연도 연구과제 선정에서 제외함
- 법령에 의거하여 자체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연구과제는 해당사항 안됨
- 연구비는 2019년도 총 예산 및 환경부 편성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과제수/과제별연구비/연구기간은 도출 및 선정 절차에 따른 심사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외부기관에서 연구비 부담율이 많을 경우 연구과제 선정시 우선순위가 상향조정될 수 있음

■ 기 타

-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jgecc.kr) 과제공모 공지사항 참조
- 과제제안서 서식 다운 : 전국 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과제 목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로 문의 바람
- 주소 : (우6324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교로102 제주대학교 본관 2층(대학원동)
- 전화 : 064-754-2411
- Fax : 070-4850-8831
- 담당(연구지원팀장) E-mail : kbh72@naver.net

2018. 09. 12.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장 조은일

2018.9.17(월)

미래에셋대우 제주WM, 신제주WM
통합 운영안내

- 일 정 : 2018년 9월 17일(월)
- 연 락 처 : 064)745-0097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3351, 2층 (노형동, 세기빌딩)

